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8
----------	-----

발의연월일 : 2024. 10. 10.

발의의원 : 이진환, 박경원, 김상수,
이상기, 김지훈(국), 김지훈(민)
김영실, 한송연, 박윤옥,
이수련

1. 제안 이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을 유도하며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여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운전면허”,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 2조)
- 나. 교통안전협의체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6조)
- 다. 교통안전교육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 마. 지원금 환수를 규정함. (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6.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의2)의 제목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령운전자(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를 “고령운전자”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 지원(단, 1인 1회에 한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관련 사업지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운전면허</u> ”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6. “ <u>고령운전자</u>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생략) <u><신설></u>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u>

제9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
----- 고령운전자-----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

1.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 지원(단, 1인 1회에 한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관련 사업지원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

	<u>원을 받은 경우</u>
	<u>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u>
	<u>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u>
<u>제10조</u> (시행규칙) 이 <u>조례</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u>제12조</u> (시행규칙) -- <u>조례의</u>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④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 지원(단, 1인 1회에 한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 제6조 제2항)

- 교통안전협의체 심의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2025년 본예산(안): 2,400천원(100천원 × 6명(市 공무원 제외 위원) × 4회(분기별))

*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총 9명(임기(3년): 2025.1. ~ 2027.12.)

- 당연직(5) : 교통정책과장, 교통시설1,2팀장, 교통관리계장(남·북부경찰서)

- 위촉직(4) : 도로교통공단1, 교통전문가3

- (개정안 제7조 제4항)

-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의 경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움.

- (개정안 제10조 제1호)

- 19년부터 국비 또는 도비 매칭으로 매년 진행해온 사업*으로써 해당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4년 89백만원(국27, 도31, 시31) / ‘23년 197백만원(도92, 시105)

- (개정안 제10조 제2호)

-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10만원 지원)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며, 향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움

4. 작성자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